

94.1.25

전망대

정운영 논설위원



94.1.25

토머스 모어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탄식으로 16세기 영국 농촌의 참상을 고발했다. 모직공업의 발전으로 양모 수요가 늘어나자, 지주들은 농장을 목장으로 바꾸어 양을 기르기 시작했다. 글자 그대로 “양의 발굽은 황금을 낳았지만” 광활한 영주의 장원은 사람 대신 양떼를 지키는 개들이 차지했다. 쫓지에 토지에서 추방된 농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고 말았다. 뒷날 진보적 사상가들이 한층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 라틴어원 프롤레타리우스는 “오직 생식기능으로만 국가에 봉사하는 가장 비천한 계급”이란 매우 모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아무튼 그들의 일터를 빼앗은 원흉은 양이 아니라 자본이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 이래 부쩍 격화되는 국제화의 내습으로 우리 농촌은 온통 초도화 위기에 직면했다. 2001년 소의 수입이 자유화되고, 2004년에 쌀시장마저 개방되면 우리의 밥과 반찬이 대부분 외제에 점령당한다. 농업이 사양길로 접어든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으로도 그렇고,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의 좌절로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이 우리의 생명을 원천적으로 담보한다는 사실에는 한점 변함

생산비를 10년 뒤에나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 정부가 펼치려는 화려한 농정 청사진의 하나다. 유기농법이나 특용작물 재배니 하는 영농 과학화의 노력도 대내적으로는 다소 경쟁력을 개선하겠지만, 어차피 그 효과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농업에는 생산비 기준의 비교우위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정부는 자꾸 그쪽으로만 수판을 놓고 있다.

농촌 지원한다며 농민 해체

농지의 소유상한을 폐지해도 농토를 추가로 구입할 여유는 사실상 도시자본 이외에 달리 없다. 경자유전의 원칙 역시 이미 오래전에 퇴색한 선언조항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전주(錢主)유전’의 대안은 과연 온당한가? 천만의 말씀이다. 절대농지니 상대농지니, 농업진흥지역이니 비진흥지역이니, 농공단지니 농어촌산업지역이니 하며 규정과 제도가 바뀔 때마다 농토는 수시로 허물어졌지만 농촌의 발전은 뒤따르지 않았다. 외부자본의 도입으로 기업농의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가족 중심의 전업농은 경쟁력 상실로 붕괴박산이 나고 만다. 국제화란 자본에 의한 세계경제질서의 폭력적 재편인데, 이 논리의 국내판이 바로 도시자본의 농촌 침투이다.

자본의 혈통에 농업자본과 공업자본이 따로 있

‘내쫓는 농촌’의 역설

이 없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이 자주 정책당국에 의해 망각되고 있다. 며칠전 농림수산부가 대통령에게 올해의 농정방침을 보고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의 소유상한을 폐지하고, 그밖의 농지와 산지는 거래와 전용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부분이었다. 신농정 수립과 집행을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서 그 시비의 불똥이 하필이면 농지소유제도의 변경으로 튀게 되었는지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도리가 없다.

양에게 빼앗긴 사람의 일터

금년도 예산을 4조원이나 배정한 제일의 역점사업이 농업의 구조개편이고, 앞으로 15조원의 농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야심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부문도 농촌발전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선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당연히 그 대상이어야 할 농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농촌을 지원한다면 농민의 해체를 강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른바 농업진흥지역의 규모는 2백5만ha로서 전체 농지의 50.2%에 이른다. 제법 상당한 특혜가 따른다는 이 지역에 포함되어도, 현재의 소유상한 20ha만큼씩 산술적으로 나눈다면 고작 10만가구 정도가 안정을 되찾게 된다. 이는 6백만 농민의 1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왕성한 식육의 외부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 상한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4백년전 영국의 경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양이 아닌 공장과 스키장과 관광호텔이 농토를 먹어치운 사실이다. 그러나 농촌 프롤레타리아를 강제적으로 양산한다는 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농 육성의 신화가, 아니 그 착각이 여기서 비롯된다.

경쟁력이란 일차적으로 생산비의 국제비교에 근거할텐데, 솔직히 나는 우리의 여건에서 아무리 생산성을 높여도 천혜의 유리한 조건을 타고난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이 어려우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제가격보다 4배 이상 비싼 국내의 쌀

을 수 없다면 농촌으로 유입된 자본이 농작물 재배보다는 토지소유라는 잣대에 관심을 기울일 위험이 크다. 사실 투기와 투자를 법으로 엄격히 가르기도 힘들거니와, 용도만 바꾸면 투기는 얼마든지 투자로 행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농지전용의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궁핍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수지 안맞는 논밭을 묶어두기보다는 풀어주려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낼 터이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용 재량은 실제로 농민을 위한 재량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재량으로 행사되기 십상이다. 때를 맞추어 재개발기업의 부동산 구입이 허용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 범위가 확대되었다. 누구의 권리인지는 몰라도 손발이 척척 맞는다.

땅을 돈으로 대하고 농사를 자본의 수익성으로 계산하는 한, 이런 유혹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투기가 휩쓸어 땅값이 오르면 그 부담이 생산비로 전가되기 마련인데, 그럴 때 경쟁력 강화의 거창한 명분은 물건너가고 만다. 그 투기 덕분에 당장은 농민의 수입이 늘어날지 모르나, 농토를 버린 농민의 생활대책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면 도대체 그런 ‘산술’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 논밭은 삼시간에 공장으로 바뀌지만, 공장을 논밭으로 도로 바꾸기는 영원히 불가능한데 말이다.

물 건너갈 경쟁력 강화 명분

대통령은 ‘돌아오는 농촌’ 건설을 장엄하게 약속했다. 그러나 누가 돌아오는가? 농지의 소유상한을 폐지하여 농민을 내쫓고, 도시자본이 침입하여 농민을 내쫓고, 농지 전용을 확대하여 농민을 내쫓는 이 농촌에 과연 누가 돌아오는가? 실로 돌아오는 것은 자본이요 내쫓기는 것은 농민인데, 이 음험한 기도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 농림수산부가 오히려 앞장서고 있으니 그저 아연할 따름이다. 농토를 탐욕스런 자본의 먹이로 들이미는 것이 신농정의 발전 처방이라면 ‘내쫓는 농촌’의 기막힌 역설은 피할 길이 없다.